

‘자치분권 시대’ 중앙지방협력회 출범

대통령·시도지사 지방자치 정책 논의 제2 국무회의 청와대서 첫 회의...향후 운영방안 의결·과제 논의

앞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분기마다 개최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명실상부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으로도 입되는 것이다.

첫 회의가 열린 이날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 조례 발안법 등 문재인 정부가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전해질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전 장관은 우선 회의 운영방안과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열고,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 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연 1~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하게 된다.

이 밖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

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 3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고,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각 65조1천억 원씩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각각 13조3천억 원, 11조8천억 원 늘어난 것이다.

또 지역 균형 뉴딜에 올해 13조1천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등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55만 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15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27.5% 늘어난 13조여 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역소멸 등 구조적 지역경제 변화에 대응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지원하는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과제

도 논의했다. 대한민국의회의회의장인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 의회 입장에서는 기준인건비 독립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적권이 부여되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년네트워크 회원들 정책질의서 전달 청년네트워크가 13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형배·주철현 특보단장 “대선 집중”

“강 전 수석 호남특보단과 별개의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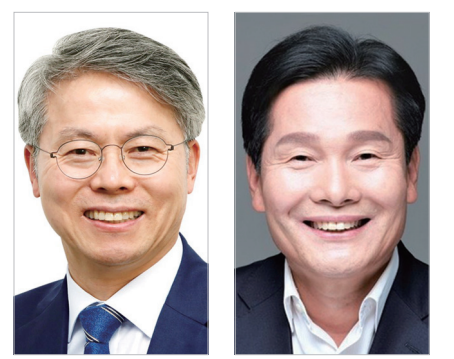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할기구인 광주·전남 특보단장을 맡은 민형배(광산)·주철현(여수갑) 의원은 13일 “대선이 지방선거의 교두보로 활용되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에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저희의 활동은 지방선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수립만이 유일한 목적임을 분명히 한다”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요청과 열망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 확정 짓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6월 지선에서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장을 맡은 호남특보단과는 별개로 활동하는 전혀 다른 기구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맡은 광주·전남 특보단은 지역·직능·정책별로 구성됐으며, 이재



민형배 주철현

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이끌며 정책·공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어느 지역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광주·전남의 지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보다 압도적이지 않은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예전의 지지를 회복해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우 기자

먹는 치료제 2만1천명분 도착...오늘부터 처방

면역저하자 우선 투약

정부가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구매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13일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이날 낮 12시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도입분은 14일부터 바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된다.

당국은 치료제 물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투약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한다.

투약 시점은 증상 발현 5일 이내여야 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추후 공급량과 환자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 투약 대상을 조정·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뒤 각 지방자치단체나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고



1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이날 처음 국내로 들어온 미국 제약사 화이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약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병원 입원자도 필요한 경우에는 투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먹는치료제가 사용되면 위중증 환자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의료 체계가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미국 머크앤컴퍼니(MSD)와도 먹는치료제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지지율 하락’ 심상정 일정 중단

정의당 선대위 해체...위원장 등 일괄 사퇴

심상정 대선후보의 ‘일정 전면 중단 후 집거’로 혼란에 빠진 정의당 선대위가 13일 주요 보직자들의 총사퇴를 결의했다.

정의당 선대위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심 후보의 의원화관 사무실을 방문한 뒤 신언직 사무총장 등 당 집행부를 소집, 내부 논의를 마친 뒤 이러한 결단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와의 연락은 여전히 닿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후보는 전날 저녁 여영국 총괄상임 선대위원장 등 극소수 인사들에게 일정



중단을통보하고 후대전화를꺼놓은 채 집거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 경기도 고안시 자택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실상 현 선대위를 해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결정 주체인 심 후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당 차원의 ‘쇄신 의지’를 먼저 보여주는 차원에서 선대위 해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